



주간 통일정세

2012-3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은·리설주, 모란봉악단 공연 또 관람(7/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전승절(7·27)'을 맞아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음.
 - 리설주의 공개활동이 실명으로 보도된 것은 지난 25일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참석, 26일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 소식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임.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당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진·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비서 등을 비롯해 전쟁노병, 예술인, 대학생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함.

- **中왕자루이 방북, 김영일과 회담(종합)(7/31, 조선중앙통신)**
 -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30일 방북해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 측에서는 김영일 노동당 비서,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동석함.
 - 통신은 "쌍방은 자기 당 활동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데 대해 상호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北최영림 총리 수해현장 점검(7/31, 연합뉴스)**
 -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가 평안남도 성천군과 신양군 등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난 지역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최 총리는 성천읍 지구와 용흥협동농장 등을 돌이보며 부문별 피해상황, 토지유실 및 매몰 실태, 홍수피해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함.

- **"北 김정은 어머니 고평희 묘비명은 '고용희'"(8/2, 산케이신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어머니인 고(故) 고평희의 묘비명이 '고용희'로 표기돼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일본내 북한 관련 시민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



(RENK)' 등이 노동당 간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증언을 통해 이렇게 밝혀졌다고 전함.

- 고영희의 묘지는 그의 탄생 60주년인 지난 6월 26일 전후 평양 북동부의 '혁명열사릉' 부근에 조성됐으며 묘비에는 앞면에 고영희의 사진이 새겨졌고, 뒷면에는 "1926년 6월26일 출생, 2004년 5월24일 서거, 선군 조선의 어머니 고용희"라고 기록되었음.

● **北 김정은 외교 무대 데뷔...中왕자루이 만나(종합)(8/3,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일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고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함.
- 3일 새벽 김 제1위원장이 왕 부장과 만났다고 전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인사를 전달하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이 왕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증진해 주민이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신화통신이 전했으며 왕 부장이 북중 양측은 전략적인 접촉과 주요 국제, 지역 문제에서 공조를 확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 **김정은, 英외교관과 함께 롤러코스터 즐겨(8/3, 파이낸셜타임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영국 외교관과 함께 놀이공원 시설을 타고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함.
- 지난주께 김정은이 새로 문을 연 평양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롤러코스터를 타고 즐기는 사진이 공개됐는데, 김정은의 바로 앞 자리에 탄 사람이 바나비 존스 북한주재 영국 대사관 1등서기관이라고 영국 관리들이 확인함.

● **北 김영남 베트남·라오스 방문차 출국(8/4,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의 베트남·라오스 방문에는 리용남 무역상, 강민철 채취공업상, 공석웅 외무성 부상 등이 수행함.

● **北 리영호 지난달 11일 보위사령부가 연행 구속(8/4, 교도통신)**

- 북한군의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는 지난달 11일 인민군 보위사령부에 연행돼 구속됐으며 연행 당시 총격전 상황까지 갔으나 리영호가 자신의 호위부대를 만류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리영호 총참모장이 지난달 11일 새벽 평양의 공관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지시를 받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조경철(상장) 사령관 등 10명에게 연행돼 구속됐다고 전했으며 조 사령관 등이 평양시 서부에 있는 리영호 총참모장 공관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리 총모장의 호위부대가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막음.

● 北김옥, 신병 치료차 베이징 수차례 방문(8/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여인인 김옥이 올해 들어 병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베이징의 유력한 소식통은 5일 "김옥이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수차례 목격됐으며 방문 목적은 부인병 치료를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막 50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김옥이 병치레가 잦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임.

■ 김정은동향

- 7/30, 김정은 제1위원장, 전승절에 참가한 전쟁노병대표들과 기념촬영(7.30,중통·중방·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김경희,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주규창, 리병삼, 태종수, 리을설, 태종수, 리을설, 황순희, 김철만을 비롯한 항일의 노투사들
- 7/31, 김정은 제1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7.31,중통·중방)
 -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등 동행
- 8/3, 김정은 제1비서, 8.2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접견·담화 및 만찬 마련(8.3,중통·중방·평방)
 - 강석주(내각부총리)·김양건(黨 비서)·김성남(黨 부부장) 및 '류홍차이' 駐北 중국 대사 접견 배석
 - 최룡해(총정치국장)·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강석주(내각부총리)·김영일·김양건·문경덕(黨 비서)·김병호·김성남·리수용(黨 부부장) 만찬 참가
- 8/5, 김정은 제1비서, 신천군 새날농장 김금순 등 모범 선동원들에게 감사 전달(8.5,중방)
 - 최룡해·현철해·김병호·황병서 동행
- 김정은 원수, 운곡지구종합목장 현지지도(8.6,중통·중·평방)
 - 최룡해·현철해·김병호·황병서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강반석(김일성 母) 사망(7.31) 80돌 중앙추모회, 7.31 김영남·최영림·최룡해·최태복(추모사)·김정임(黨역사연구소장/사회) 등 참석 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31, 중방·평방·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평안남도 안주시 큰물피해정형 현지요해(8.4, 중통)
- 전국 각지에서 큰물피해 복구사업 군중적으로 진행중(8.5, 중방)

나. 경제

● 북한 상반기 중국산비료 수입 급증(7/31,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012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對中)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 자료를 통해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을 근거로 북한이 올해 들어 6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는 21만3천800여t이라고 밝힘.

● 국제적십자사 "北 수해지원 30만 달러 배정"(8/2, 미국의 소리(VO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홍수 피해를 본 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 예산 3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일 전함.
- IFRC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적십자회가 수해를 입은 2천500 가구, 주민 1만 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30만 스위스 프랑(약 30만8천 달러)을 책정했다"고 밝힘.
- IFRC는 지난 3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평안남도과 강원도의 수재민들에게 앞으로 3개월간 임시천막을 만들 수 있는 비닐 박막과 이불, 주방 기기, 수질 정화제, 위생 용품 등을 제공할 계획임.

● 北 외화 전자결제 빠른 신장세(8/3, 자유아시아방송(RFA))

- 평양에 외화결제 현금카드 '나래'를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상점 등 가맹점이 120곳을 넘어서는 등 북한의 전자결제 건수가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려호텔과 평양호텔, 대동강식당, 외국인 숙소, 전시장, 합영회사, 꽃집에서 정육점, 보석상, 자동차 정비소 약국까지 나라카드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전함.

● 北 대풍그룹, 실적부진으로 해체(8/5, 연합뉴스)

- 북한의 외자유치 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이 실적 부진 등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대북 소식통은 5일 "대풍그룹이 외자유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초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8.20~23 진행 및 中·러·프랑스·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체코 등 참가 예고(8.2,중통·중방)
- 전시회기간 투자설명회와 상담회, 라선경제무역지대 회사들에 대한 참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예견됨.(김순희, 라선전람사 과장)
-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는 지난해 8월22일에 개막된 바 있음.

다. 사회·문화

● 北 "일부 지방 하루에 400mm 폭우"(7/30,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남포시,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방에서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하루 동안 폭우가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평안북도는 442mm의 비가 쏟아진 박천군을 비롯해 운전군(414mm), 향산군(383mm)이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평안남도의 경우 안주시(404mm), 개천시(374mm), 덕천시(361mm) 등이 300mm 이상을 기록함.

● 미리보는 北 마지막(?) '아리랑 공연'(7/30, 연합뉴스)

- 북한이 자랑하는 '아리랑' 공연이 올해는 8월1일 평양 5·1경기장에서 4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릴 예정.
- 지난 2002년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해 처음 열린 아리랑 공연은 대규모 수해로 취소된 2006년을 빼고 매년 열렸지만 올해 행사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짐.

● 北-서양 첫 합작영화 부산영화제상영 희망(7/31,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31일 북한과 서양이 만든 첫 합작영화 '김 동무 날아가다'(Comrade Kim Goes Flying)에 참여한 벨기에 출신 엔저 대일만스씨와 영국 출신 니콜라스 보니씨가 이 영화를 오는 10월 열리는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길 희망했다고 보도함.
- 이 영화는 벨기에 여성감독 대일만스씨와 베이징에서 북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북한 관련 기록영화 3편을 제작했던 보니씨가 북한 영화계 인사 럼미화, 김광훈 등과 만든 82분짜리 로맨틱코미디로 올해 9월20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상영될 예정임.



- **北 '대집단체조' 아리랑 개막(8/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집단체조(매스게임)' 예술공연인 '아리랑'이 1일 평양 능라도의 '5.1경기장'에서 막을 올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근로단체·성·중앙기관 관계자, 인민군 장병, 평양시내 근로자, 외국인들이 관람했고 홍광순 문화상이 개막 연설을 함.

- **北 대학생 베트남 유학 추진(8/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대학생들의 베트남 유학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베트남 국영통신사인 베트남통신(VNA)을 인용해 보도함.
 - VNA에 따르면 성자립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은 지난 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티엔 년 베트남 부총리를 만났고 응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

- **北 "홍수로 169명 사망...400여명 실종"(8/4, 조선중앙통신)**
 - 최근 평안도와 자강도 등지를 몰아친 집중 호우로 북한 주민 56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통신은 수해피해 집계 자료를 인용해 6월 말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달간 태풍과 폭우에 의한 큰물(홍수)로 169명이 숨지고 144명이 부상했으며 실종자도 400여명에 달한다고 전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인력 145명 中투먼 섬유공장 근무시작"(7/30, 교도통신)**
 - 북한 인력 145명이 국경 인근 중국 투먼(圖門)시 섬유공장에 취업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중 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투먼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섬유공장은 지난 5월 유명 스포츠 브랜드 제품 생산을 위해 북한 여성 인력을 고용함.
 -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 1천500위안(약 26만7천원)을 받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숙소를 제공 받으며 급여의 80~90%는 북한 당국이 선취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 홍수 피해 유엔 조사단 31일 방북"(7/31, 연합뉴스)**
 - 최근 북한에 집중된 큰비와 태풍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이 31일 방북한다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가 30일 밝힘.



- 유니세프 동아태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 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신속평가팀을 북한의 피해가 심한 두 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함.
- **中 매체, 北 조평통 개혁개방설 부인에 촉각(7/30, 신화통신; 환구시보)**
 -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전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일각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황당무계하고 우스운 소리라는 논평을 냈다고 전함.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인터넷판에서 조평통 대변인이 북한의 정책변화 또는 개혁개방에 대한 전언은 '허튼소리'라고 논평했다고 보도함.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한국 당국이 북한의 정책변화와 개혁개방 여부를 추론하고 있으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어떤 정책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日 44개 광역단체 北 납치문제 조기해결 요구(8/2, 산케이신문)**
 - 일본의 4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44개 도도부현 의회가 아울러 지금까지 일본인 피랍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채택된 결의안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중의원 의장 등에게 전달됨.
- **"북한에 식량지원 시급"(8/2, 연합뉴스)**
 - 최근 쏟아진 폭우로 막심한 피해를 본 북한에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유엔이 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평양에 있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이번 주 초 북한 수해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해 이날 배포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함.
 -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에 내습한 폭우와 태풍으로 최소한 119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김.
- **"北, 유엔에 의약품·식수공급 우선 요청"(8/3, 미국의소리(VOA))**
 - 심각한 큰물(홍수) 피해에 직면한 북한이 최근 유엔에 식량과 연료, 의약품, 식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줄도록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북한 당국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수해가 심각한 6개 군의 경우 약 5만 가구가 당장 깨끗한 물을 지원받아야 할 실정이라고 전함.
 - 북한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들이 2일 발표한 실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설사병 환자가 강원도 천내군에서 네 배 증가했고 평안남도 성천군에서도 30% 늘어남.



- WFP, 北수해에 곡물 336t 긴급지원(8/4, 미국의소리(VO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흉수 피해를 본 북한에 곡물 336t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정부의 요청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16개 군에 곡물 336t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중앙통신사 논평(8.1), 일본의 과거범죄(강제연행, 위안부 등) 왜곡은 '국제사회의 버림을 받고 정치도덕적 만신창이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8.1,중통)
 - "조선전쟁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조선군대와 인민이 미국의 호전세력에게 다시 한번 내리는 경고"라며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 비난(8.2,중통 · 노동신문/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김영남, 8.5 베트남 공식친선 방문차 하노이 도착(8.6,중통 · 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 적대정책에 핵억제력 강화로 대처"(7/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는 핵억제력 강화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꼬리를 물고 나서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걸고드는 정치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미국의) 최고당국자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이 '세계를 위협한다'고 혈뜯고 군부당국자는 케케묵은 '도발' 타령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지금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신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그칠새 없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대변인, 7.31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핵억제력 강화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北)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라고 '미국의 反北정책에 초강경 대응' 천명 담화 발표(7.31,중통 · 중방)



3. 대남정세

- **北,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 사실상 거부(7/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신변안전 보장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이란 취지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완전 결판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 류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기존 입장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음.

- **현대아산 "정몽헌前회장 추모식 금강산서"(종합)(7/31, 연합뉴스)**
 - 금강산 현지에서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9주기(8월4일) 추모식을 열겠다는 요청을 북한이 수용했다고 현대아산이 31일 전함.
 -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금강산에서 정몽헌 회장 추모행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에 북측이 지난 28일 '와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힘.

- **北 "테러 사과 없으면 김영환·조명철 등 처단"(7/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동상 파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우리 최고존엄을 겨냥한 특대형 국가정치테러 범죄에 대해 공식사죄하고 책임 있는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전함.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체포된 월남도주자 전영철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괴뢰 패당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와 특대형 정치테러행위의 진상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힘.

- **北, 을지훈련 맹비난 "한·미의 침략전쟁연습"(8/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을 통해 UFG를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며 모험적인 핵전쟁연습의 계단식 확대"라고 비난함.
 - 논평은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특대형 국가 정치테러사건을 조작한 미국과 '×명박역적패당'이 그에 대해 사죄할 대신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오직 죽음과 시체뿐"이라고 경고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김계관 뭐하나.. 데이비스 "최근 연락 없어">(7/30)

-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으로 국제 외교계에 유명한 북한의 '협상일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최근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 지난 5월만 해도 북한은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 발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고 미국에 대해 '협상 메시지'를 보냈음. 이에 따라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가 미국에 대해 새로운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김계관 부상의 역할도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현지 외교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김계관 부상의 행적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대미 협상 라인의 정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실제로 김계관 부상의 최근 행적은 확인된 것이 거의 없음. 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의 발사계획을 발사한 직후인 3월20일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위성발사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고 '이른 시일 내 회동'을 제안한 것이 외교계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역할'임.
- 통상 그는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들며 북한의 '대화'의지를 과시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곤 했음.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27일 워싱턴DC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 59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김계관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함.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에 대화의 기회를 줬으나 북한이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함.
-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해온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대북 식량 지원을 고리로 한 '2.29합의'를 도출했으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협상국면이 무산됐음을 지적한 것임. 그는 6자회담 등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의무, 특히 비핵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조기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특히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내 보수 세력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대화 재개나 대북 식량지원 등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외교소식통은 "김계관 부상의 역할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단지 북미 관계의 경색국면에서 그가 나설 일이 없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北 "美 적대정책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처"(7/31)**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는 핵 억제력 강화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라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꼬리를 물고 나서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걸고드는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미국의) 최고당국자가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 '세계를 위협한다.'고 헐뜯고 군부당국자는 케케묵은 '도발' 타령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지금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신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그칠새 없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함. 대변인은 "미국이 가장 악랄하고 끈질긴 반공화국 제재와 봉쇄책동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제는 막강한 핵억제력이 있고 그것을 계속 강화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군수공업이 있기에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계속해도 끄떡없이 경제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네바다주(州) 르노에서 열린 해외 참전 용사회(VFW) 전국총회에서 북한 및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들 나라가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도록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힘.

나. 미·북 관계

● **北 " '동까모' 본거지는 美...초강경 대응"(종합)(7/30)**

- 북한은 25일 "미국이 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북한 외무성은 정전협정 체결일(1953·7·27)을 이틀 앞둔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정전협정 체결로부터 59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적대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 표현"이라고 강조함. 담화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 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전역사의 총화"라고 말함. 이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사품'이나 흥정물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먼저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함.



● "북미, 싱가포르서 3일간 비공식 접촉"(8/3)

-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자신들이 '핵문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배경을 설명하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힘. 싱가포르 회동에 참가한 북한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이메일을 보내 북미 비공식 접촉 사실을 확인함.
-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베이징(北京)에서 고위급 협의를 가진 이후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식량(영양) 지원을 골자로 한 '2.29합의'를 발표했으나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합의 이행을 무산됨. 양측은 최근까지도 뉴욕 채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지난달 20일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조선반도에서는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며 '핵문제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는 강경 성명을 발표함.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DPRK)에 대해 적대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싱가포르 북미 비공식 접촉과 관련해서는 트랙 2(민간채널) 회동이 열린 사실은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간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음.

다. 중·북 관계

● 中 왕자루이 방북, 노동당 김영일과 회담(7/30)

-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30일 방북해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북한 측에서는 김영일 노동당 비서,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동석함. 통신은 "쌍방은 자기 당활동 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해 상호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음. 왕 부장은 지난해 6월 리위안차오(李源輔) 당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바 있음.

● 북한 상반기 중국산비료 수입 급증(7/31)

-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012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對中)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 자료를 통해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을 근거로 북한이 올해 들어 6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는 21만3천800여t이라고 밝힘. 이는 지



난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 19만400t보다 12% 증가한 것임. 북한이 올해 1월부터 석달 간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6천500여t에 불과했지만 4월 1만5천218t, 5월 6만9천348t, 6월 12만2천776t 등으로 수입량이 갈수록 늘고 있음. 권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에서 많은 비료를 수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농업 생산 증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북한의 비료 생산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서둘렀을 것"이라고 분석함.

- 반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쌀, 옥수수, 밀가루 등 곡물은 13만5천648t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4만9천173t에 비해 9% 줄었음. 이처럼 중국산 곡물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 가을 북한 내 작황이 다소 호전된 데다 올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의 무상 식량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권 연구위원은 설명함.

● 김정은, 왕자루이 면담... "주민 행복이 목표"(8/3)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일 방북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증진해 주민이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밝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왕 부장을 평양에서 면담, 양국 관계의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북한 내정 상황에 대해 이같이 언급함. 김정은은 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에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함. 아울러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과 정부가 작년 말 사망한 김정일의 유혼을 받들고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깊게 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함. 김정은은 양국이 선대에서 확립하고 키워온 우의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함.
- 그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며 중국공산당 영도하에서 중국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혁혁한 성취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함. 이에 왕자루이는 김정은이 북-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울인 큰 관심과 열정에 사의를 표시함.
- 왕자루이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양자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북-중간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함. 이어 왕자루이는 북한 측과 고위급 관계를 유지하고 당 사이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협력을 증대하도록 함께 힘을 다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함. 왕자루이는 양측이 전략적인 접촉과 주요 국제, 지역 문제에서 공조를 확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임. 지난달 30일 중국 당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왕자루이는 앞서 김용일 북한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나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함.



라. 일·북 관계

● 日 44개 광역단체 北 납치문제 조기해결 요구(8/2)

- 일본의 4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44개 도도부현 의회가 올 들어 지금까지 일본인 피랍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채택된 결의안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중의원 의장 등에게 전달됨.
- 북한은 2002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한 뒤 이 가운데 요코타 메구미 등 8명은 숨졌다며 나머지 5명을 일시 귀국 형식으로 일본으로 돌려보냄.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이 요코타 메구미가 숨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음.

마. 기 타

● <北 처단위협 대상자들 "놀랄 일 아냐">(8/1)

- 북한이 '동상 파괴 미수사건'에 대한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 인사들은 북한의 실명 위협에도 대부분 담담한 태도를 보임. 북한이 밝힌 처단 대상에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인사 3인과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영환 씨 등 총 4명임.
- 김성민 대표는 1일 "북한이 내 이름을 거론하며 처단 운운한 것은 저들이 만들어 낸 동상 테러 자작극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의 위협은 탈북자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더욱 새로운 각오로 북한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힘. 박상학 대표는 "나에 대한 북한의 공식 위협은 2008년부터 있었고 지난해 9월에는 나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시도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오는 15일 임진강에서 대북 배라를 날릴 계획"이라며 "그날 행사에는 이번에 북한이 처단대상으로 지목한 조명철 의원과 김성민 대표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함. 김 대표와 박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위해 가능성이 제기돼 이미 우리 경찰 당국으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음. 조명철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조 의원의 의정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김영환 씨의 측근인 최홍재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과거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씨 피살사건이나 황장엽 선생에 대한 여러 번의 테러 시도 등으로 봤을 때 이번 북한의 협박은 그냥 무시할 사안을 아닌 것 같다"며 "경찰 측에서 김영환 씨 신변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함. 그는 "김영환 씨에게 있어 북한 민주화 운동은 사명"이라며 "그를 비롯한



우리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더라도 북한 주민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을지훈련 맹비난 "한·미의 침략전쟁연습"(8/4)**

- 북한이 오는 20~31일 열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맹비난하고 나섬.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을 통해 UFG를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며 모험적인 핵전쟁연습의 계단식 확대"라고 비난함. 논평은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특대형 국가 정치테러사건을 조직한 미국과 '×명박역적패당'이 그에 대해 사죄할 대신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오직 죽음과 시체뿐"이라고 경고함. 올해 UFG에는 미군 3만여 명과 한국군 5만6천여 명이 참가하고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이 참관할 예정임.

● **美상원, 탈북자 강제복송 제동 법안 통과(종합)(8/4)**

- 미국 상원이 미국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H.R.4240)'을 의결함. 미국 상원이 지난 5월 하원 의결을 마친 이 법안을 2일(현지시간)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임. 현재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졌다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3일 전함.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안은 발효됨.
-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공화, 플로리다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 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므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복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함.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UNHCR 직원의 탈북자 면담 허용을 요구하도록 함.
-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대신 1960년 북한과 맺은 '조선-중국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강제 송환하고 있음. 이와 함께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함. 레티넨 위원장은 3일 성명을 통해 "세계는 평양 정권에 의한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만행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WIPO의 對北지원 의혹, 내주 독립조사 시작"(8/5)

- 최근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첨단 기술 제공 의혹과 관련한 외부 독립기관의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알려짐. 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WIPO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주부터 '전면적인 외부 독립 조사(full independent external inquiry)'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적용될 방식과 권한은 미 국무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정해졌다"고 밝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조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내비침. 그는 또 "최근 미 정부로부터 접수한 정보 및 문서 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응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는 다음달 10일께 보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 국무부 대변인실도 폭스뉴스의 관련 질의에 "이번 조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매우 신뢰할 만한 인물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이 사안을 처음 파악한 이후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WIPO와 협조하고 있다"고 확인함. 이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위원장과 하워드 버먼(민주·캘리포니아) 간사를 중심으로 WIPO에 대해 이번 문제를 외부 독립기관에 의뢰해 조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됨. 당시 회의에서 민주·공화 양당은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북한 정권에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중대한 문제에 오바마 행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 이에 앞서 하원 외교위는 WIPO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컴퓨터와 관련 첨단 장비를 유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이란에 반입시킨 것과 관련해 유엔 제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섬. 그러나 WIPO는 북한 등에 제공한 것은 기본적인 정보기술(IT) 장비라면서 유엔 제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함. 아울러 미 하원 외교위가 출석을 요구한 제임스 폴리 사무차장과 미란다 브라운 총장 보좌역은 이번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함.
-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WIPO에 계속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잠정적인 결론은 유엔 제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軍, 이달 중순 독도방어 합동훈련(8/2)

- 다른 나라 선박의 독도 침범에 대한 저지능력을 키우기 위한 독도 방어 훈련이 이달 중순 동해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됨. 군 관계자



는 "이달 중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독도 방어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면서 "연례적인 성격의 훈련으로 지난 2월에도 실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호위함 등 해군 함정 10여척과 공군 F-15K 전투기, 육군 예하부대 등이 참가하며 해군 1함대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 통제함.

- 훈련은 가상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상황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으로 이를 퇴거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란 작전명으로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해오다 몇 년 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국방전략대화 개최..군수지원MOU 논의(7/30)

- 한국과 중국은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 이용걸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마샤오편(馬曉天·상장)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대표로 참가함.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양국군의 상호군수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군수협력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논의는 끝난 상황임.
-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내에 상호 군수지원 MOU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짐. 국방부 관계자는 "재난구호 시 상호군수지원 양해각서와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는 국방교류협력 스터디그룹 정례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초급 장교 양성기관 등 교육 분야 교류 확대 방안도 다뤄질 것" 라고 전함.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은 회의 결과를 31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매년 개최되는 국방 분야 고위급 정례 협의체임.

● <中 김영환 사건 '반격'...韓·中 외교 대립 고조>(7/31)

- 중국 정부가 김영환 씨 고문사건에 대해 입을 엮. 고문한 사실도 없고 조사과정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는 게 골자임. 중국 외교부는 31일 연합뉴스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의견을 결정해서 통보함.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김영환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김영환 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이 올해 3월 29일 다롄(大連)에서 이른바 '탈북자회의'를 하다 체포되고서 3개월여 구금 조사를 거쳐 7월 20일 석방되기까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 왔음.



- 중국의 이런 반응은 김영환 씨가 석방 닷새 후인 25일, 그리고 30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구금 중 가혹행위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국 내에서 그와 관련해 규탄 여론이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됨. 김씨가 "4월10일부터 이레 동안 연속으로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물리적 압박이 시작됐다"며 "지난 4월1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구타와 전기고문이 5~8시간 정도 지속됐다"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들이대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나온 반응인 셈임. 중국은 특히 김영환 씨 석방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내 인권, 종교 단체 등이 결합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중국을 고문 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임.
 -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 정부의 외국인 고문 주장이 국제 이슈화하면 국가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함. 중국은 올해 상반기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문제 삼아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데 크게 반발한 바 있음.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김영환 씨 사건을 거론하고 나선 점에 비춰볼 때 이어 관영 언론매체들이 '파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매체는 중국 내에 팽배한 '애국주의' 성향을 바탕으로 자국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인용하면서 김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됨.
 - 우려스런 대목은 통상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여론몰이'에 나서면 중국 국민 대다수가 그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여온 탓에 김영환 씨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 극단적인 '반한 정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임.
 - 중국 정부의 김영환 씨 고문사건 대응 방향은 짐작할 수 있어 보임. 우선 한국 측의 고문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내보이라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큼.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물증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이야기임. 고문은 구금 초기에 집중됐고 그 이후 3개월간 가혹행위 없이 노역을 시킨 탓에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김영환 씨 진술을 역이용해 '허위 주장론'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김영환 씨 고문 사건은 이미 한중 양국 간에 외교전으로 비화했다는 분석도 나옴. 한국 정부는 구금 당시 김씨와의 영사 면담을 통해 고문 등과 관련한 가혹행위를 전해 듣고 중국 정부에 진위 조사를 요구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중국은 정부 간 접촉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고문 주장을 일축해왔고 이번에 연합뉴스에 공식적으로 고문 사실을 부인한 점으로 미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한중 수교 20주년인 올해에 한중 간 외교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김영환 고문' 한중 외교 갈등 장기화(8/5)
- 중국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으로 한·중 외교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중국은 계속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 정부는 재조사를 반복 촉구하며 양국 관계가



- 악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중국에서 구금 당시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정부 당국자는 5일 "김영환씨의 진술은 매우 생생한 반면 중국 측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앞으로 고위급 방문과 양국 간 회담 등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전함.
 -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3일 장밍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 대리와의 이규형 주중대사간 면담 자리에서 김씨 고문 의혹을 거듭 부인함.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도를 바꾸게 할 '결정타'가 없다는 점이 고민임. 현재로서는 김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개인인정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과 중국 내 수감자 전원에게 대한 영사 면담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임.
 - 외교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김씨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음. 우선 ICC가 다루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에 김영환씨 사건처럼 독립적인 사례는 대상이 되지 않음. 또 중국은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의 가입국이 아니어서 제소가 힘든 상황임. 중국이 가입한 ICJ에 제소를 하려 해도 명확한 고문 증거가 있어야 함. 더욱이 중국은 ICJ의 강제관할권(강제 재판권)은 수락하지 않고 있음.
 - 대중(對中)관계에 정통한 한 전직 외교관은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민사회와 인권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나 국제 인권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국제 문제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함.

다. 한·일 관계

● 민주, 日방위백서 철회촉구 결의안 제출키로(8/1)

- 민주통합당은 1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일본 방위백서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음.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영토분쟁을 쟁점화하려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한심한 정부에게 이 문제를 맡길 수 없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함. 민주당이 제출하는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면서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이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짐.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방위백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지난 8년간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음.



● <정부, 유엔서 동해 외교전.. "합의 안되면 병기">(8/2)

- 한국과 일본이 유엔 무대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유엔본부에서 제10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가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개막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회의 첫날부터 국제수로 기구(IHO)가 표준화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함.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에 대해 관계국들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경우 공통된 명칭의 합의에 노력하고, 합의가 안되면 2가지 이름을 병기하라는 1977년 IHO 결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임.
-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1일 "스스로 채택한 결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환기시키고, 진지한 노력을 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힘. 이날 우리 측은 의제에 충실한다는 차원에서 '동해'라는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곧바로 '조선 동해' 또는 '동해의 병기를 요구함. 대표단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우리와 북한이 공조를 취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동해와 일본해 병기의 근거가 없다며 남북한의 주장이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반론을 폈. 대표단 관계자는 "우리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한 만큼 많은 회원국들이 내심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개적인 지지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함. 그는 "우리와 일본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외교전을 벌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유엔 지명표준화회의는 전 세계 지명의 표준화와 용어 정의, 표기방법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유엔본부에서 열림. IHO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 지명표준화회의가 동해 병기를 '지시'할 권한은 없음. 그러나 유엔과 IHO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고 이번 회의 결과가 IHO는 물론 세계적인 지도제작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이번 회의에 IHO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유엔의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임. IHO는 지난 4월 총회에서 해도집(海圖集)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제4판 발간 결정을 2017년까지 유보함. 따라서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이 해도집(3판)에 5년 뒤 열리는 차기 총회 때까지 '동해'가 병기될 수 없게 됨. 해도집 3판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임. 총회 당시 일본 측은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은 그대로 둔 채 4판 발간을 주장했으나 어떤 회원국의 지지도 받지 못함.
-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약간 다름.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굶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동해는 일본에 주도권이 있어 최대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임. 우리 정부는 1992년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주장하고 있음. 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회



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해 단독표기가 부당함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日, 한국군 독도 주변 훈련 계획에 항의(8/4)**

- 일본 정부가 한국군의 독도 주변 방어 훈련 계획에 반발함. 4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독도 주변 합동 군사훈련 계획과 관련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말함. 그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독도 주변 군사 훈련 계획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힘. 한국군은 이달 중순 육·해·공군과 해양 경찰이 참여하는 독도 방어 합동훈련을 할 계획임. 이번 훈련에는 호위함 등 해군 함정 10여척과 공군 F-15K 전투기, 육군 예하부대 등이 참가하며 해군 1함대 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 통제함. 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란 작전명으로 독도 방어훈련을 해오다 몇 년 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의 이란 연계 쿤룬은행 제재에 반발(8/1)**

- 미국이 이란의 금융기관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쿤룬(昆倫)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섬.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1일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해당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제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함.
- 친 대변인은 "쿤룬은행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이익은 물론 미중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미국 측이 국내법을 이유로 중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와 관련해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더불어 절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함. 그는 미국 측의 이번 조치와 관련, 베이징(北京)과 워싱턴의 외교채널을 통해 엄중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임. 이어 "중국은 이란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정상적이고 공개, 투명한 상업협력을 해왔다"면서 "중국은 이란 핵 계획과는 어떤 관계도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결의도 위반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3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 적도 없다"고 주장함.
- 친 대변인은 외교부 신문사(司) 사장(국장급) 직함을 가진 수석 대변인 격으로 그가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시한다는 걸 의미함. 앞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제재 대상인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한 혐의로 이라크 엘라프이슬람은행과 더불어 쿤룬은행을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함. 미 행정부는 쿤룬은행이 이란의 테자라트 은행과의 거래로 1억 달러 상당의 이익을 낸 것을 포함해 이란 내 은행 6곳과 거래를 해왔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결



제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짐.

● 中, 美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에 반발(8/1)

- 미국이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중국 언론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섬.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1일 미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1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표시한 데 대해 "내정간섭 하지 마라"고 반응함. 관영 신화통신도 논평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여타 경쟁국에 대한 미 정부의 압력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정치 도구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함.
- 통신은 "불확실한 언론매체의 보도와 불법적인 단체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종교자유가 악화한다는 주장은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현실을 무시한 평가"라고 강조함. 통신은 "중국이야말로 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티베트 승려의 잇따른 분신 사건을 이유로 중국의 종교 탄압을 주장하지만, 분신은 분열세력인 달라이 라마가 부추기고 국제이슈화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중국은 미 국무부의 연례보고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음.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을 비롯해 미얀마,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아울러 이란,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까지 포함한 8개국을 종교자유 우려 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중국과 관련해 티베트 불교 신자,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이슬람교도에게도 심각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함.

● 클린턴, 아프리카 순방서 中 영향력 견제(8/2)

- 아프리카 7개국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문 첫 번째 나라인 세네갈에서부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냄. 클린턴 장관은 세네갈의 셰이크 안타 디옴 대학에서 1일(현지 시간) 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무역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아프리카와 지속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함.
- 클린턴 장관은 "미국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세네갈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사업 기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미국은 아프리카 고유의 가치를 뽑아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증진시키는 방식의 협력 모델을 고수하겠다."고 설명함. 이 자리에서 클린턴 장관은 "외부인이 아프리카에 들어와 단물만 빼먹고 나서 떠나는 날은 이제 끝났다"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우회적으로 언급함. 그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더 쉽고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겠다."고 말함. 이어 "모든 협력국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중국은 미국과 소원한 아프리카 국가를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려 경제 원조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국제 현안에서도 아프리카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클린턴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한다고 우려해 왔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개혁주의자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힘.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의 하룬 보랏 교수는 아프리카가 중국과의 관계를 '대등한 동반자'로 정립하려 하는 시점에 클린턴이 아프리카를 방문했다며 순방 의미를 분석함. 중국은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아프리카 5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중·아프리카협력포럼을 열고 아프리카에 200억달러(약 22조5천억원)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이는 국제 경쟁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됨. 클린턴 장관은 세네갈을 시작으로 남수단, 우간다, 케냐,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마지막으로 가나를 찾아 최근 돌연 사망한 존 아타 밀스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임.

● <美 '공중해양전' 작전개념 논란 점점 가열>(8/2)

- '공중해양전(Air-Sea Battle)'이라는 미군 작전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 미국의 한 전략가가 냉전 시기인 약 30년 전부터 구상한 이 개념은 간단히 말해 중국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일제 공격할 때 어떻게 반격할지에 대한 내용임. 그런데 구소련 대신 중국이 실제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았고 주머니가 얇아진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되자 이 개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함.
- 2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의하면 공중해양전 개념은 지난 40년간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을 이끌며 '무엇이 미국 해계모니를 위협할지'를 내내 고민했던 앤드루 마셜(91)의 작품임. 이 개념의 바탕이 된 가상전쟁에서 중국은 정밀 유도 미사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침몰시키고 아시아의 미군 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함. 그러면 미군은 스텔스 폭격기와 고성능 잠수함을 동원해 중국의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에 반격을 가함. 처음 이 개념이 제시됐을 때 미군 고위층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물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며 난색을 표함.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잇따라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해 전선을 펼치면서 이 개념은 점점 잊혀져 왔음.
- 미 공군과 해군은 최근 몇 달간 '공중해양전'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 200여가지를 제시함. 여기에는 새 무기체계 도입 요구부터 공군과 해군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됨. 중국을 대놓고 적국으로 상정한 이 개념에 대해 중국 측은 당연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임.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고위 장교는 지난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공중해양전 개념을 도입한다면 인민해방군은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조지프 리버먼과 존 코닌 상원의원이 2012년도 미 국방수권법에 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국방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문안을 삽입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미국 관리의 한 중국군 장성이 공중해양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시행된 가상전쟁 보고서에 중국이 190번 언급된 점을 들어 자신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며 "중국이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함. 공중해양전 개념이 앤드루 마셜이라는 특정인의 구상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가상 전쟁이 마셜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CSBA라는 민간 연구기관에 의해서만 시행됐다는 점도 논란거리임.
- 중국은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군 관계자들이 공중해양전 개념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일제히 CSBA로 몰려들었으며, 미 공군과 해군이 이 개념의 선결 조건을 제시할 때도 CSBA의 가상 전쟁 결과가 인용됨. 리버먼 의원실과 코닌 의원실 관계자들도 입법 활동을 위해 CSBA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털어놓았음.

● 美 국무부-中 신화통신, 남중국해 비난전(8/4)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한차례 비난전을 벌임.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4일 논평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관할할 '싼사(三沙)시' 설치에 이어 군부대 진입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한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성명을 겨냥해 중국의 주권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격함. 통신은 "싼사시 설립과 경비구(警備區) 지정은 중국의 정상적인 행정권 행사이자 군(軍) 건설과정이고 이는 중국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함. 이어 "그런 조치는 중국이 과거처럼 남중국해를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임.
- 통신은 "(이해당사국 간) 양자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며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통신은 "중국은 남중국해를 평화,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개입'하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냄.
- 앞서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면서 추이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 분쟁해역에 싘사시를 설립하고 군부대 진입 의지를 드러내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긴장완화 노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벤트렐 부대변인은 "미국은 관련된 각 측에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며 "미국에도 남중국해에서 방해받지 않을 합법적인 상업 권리가 있다"고 강조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2010년 베트남 하노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에도 남중국해 향해 자유와 관련해 국가이익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마. 미·러 관계

● 푸틴, 미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 비판(8/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을 비판함.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공수부대 창설 8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남부 울리아노프스크의 제31 공수여단을 방문해 부대 지휘관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2014년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비판하면서 아프간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미군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함. 푸틴은 미군이 내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할 경우 아프간과 인접한 러시아 남쪽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무력 분쟁과 마약 유통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지적함. 푸틴은 아프간 상황이 혼란스러워져 아프간 내 반군 세력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 남부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푸틴은 동시에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아프간 사태에 직접 개입하길 거리기 때문임을 시사 하는 발언도 함. 푸틴은 현재 아프간에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국가 군대가 주둔하면서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싸울 필요 없이 그들이 계속 남아서 싸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쪽 국경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임.
-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말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10년간에 걸친 전쟁 끝에 막대한 병력손실만을 입고 철수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음.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간 대(對) 테러전을 시작하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군대 파견만은 한사코 거부함. 대신 나토군이 아프간 전쟁을 위한 보급 물자를 자국 영토를 통과해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원함.
- 1일엔 남부 울리아노프스크 공항을 나토군의 아프간 보급 물자 환적 기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협정도 발효됨.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울리아노프스크까지 항공기로 물자를 운송한 뒤 이곳에서 열차로 환적해 나토 국가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바. 중·일 관계

● 中 "日 방위백서 근거 없는 비난"(8/1)

-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부각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정면 반발하고 나섬.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서면으로 낸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정상적인 국가방위 발전과 군사적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무책임한 언급에 반대한다."면서 일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함.
- 홍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겨 발간된 연례 방위백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엄중한 교섭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야말로 끊임없는 군비확장, 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 그리고 지역안



보 이슈와 관련한 사실왜곡 등으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고 역공함. 그러면서 "일본은 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위협론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도 언급함. 홍 대변인은 "일본은 진지하게 자신을 스스로 다시 반성해보고 지역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근처에서 해군 작전과 훈련 활동을 확장하고 있고 군사와 안보 방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해 지역과 국제사회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함. 일본은 아울러 중국의 국방비가 지난 2년 새 2배 증가했고 과거 24년간을 살펴보면 30배가량 불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이 또한 실제 지출되는 군사비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불신감을 드러냄.

사. 중·러 관계

● 中, 러시아에 동해 불법어로 할당금 내기로(7/30)

- 동해에서 러시아 경비함에 포격 나포됐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건과 관련, 중국 측이 어업 할당금을 내고 석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0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과 러시아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소개함. 홍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외교 부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며 "우선 양국 우호관계 유지라는 큰 틀에서 출발해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건 어선 선원들의 이른 시일 내 귀환이 논의되고 있다"고 확인함.
-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자국의 경제구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그에 합당한 어업 할당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중국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추가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그는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 법집행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로의 재발 방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임.
- 앞서 러시아 연안경비함인 3천600t급의 제르젠스키호는 16일 동해 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의 루룽위(魯榮漁) 80-117호에 함포 사격까지 가하면서 3시간가량 추격해 나포함.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기는 했지만, 민간 선박에 함포까지 쏜 데 대해 중국에서 거친 반발이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 그러다가 18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그때야 중국 외교부가 주중러시아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20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도주 과정에서 어민 1명이 실종됐고 해당자를 러시아 경비함이 구조하는 사이에 중국 어선이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함. 같은 날 러시아 당국도 루룽위호 선장을 기소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발표함.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돌발적이며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꼬리를 내림. 한마디로 중국이 '갈팡질팡' 외교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옴. 한편 러시아 당국은 15일과 24일에도 동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러시아 경비함의 중국어선 포격 나포사건 협상은 한마디로 중국의 '완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또 중국 어선이 러시아 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되면 어업 할당금을 내기로 공식화하면 여타 동·서해 인접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됨.

아. 일·러 관계

● <러, 쿠릴 개발 본격화...속 타는 일본>(7/31)

- 러시아가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일본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러시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해 쿠릴열도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속수무책임.
- 31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러시아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쿠릴열도 개발에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의 외국인 근로자 1천500명이 참여하고 있음. 쿠릴열도 4개섬 가운데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에서 약 1천명,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에서 약 5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음.
- 러시아는 국가 프로젝트인 '쿠릴제도 사회경제 발전계획(2007~2015년)'에 따라 도로, 공항, 항만, 학교 시설 등의 정비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한국의 건설회사도 참여하고 있음. 러시아는 지난 2000년부터 쿠릴 열도에 외국인 근로자를 받기 시작했고, 개발을 본격화한 5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수를 크게 늘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이었던 지난 2010년 일본의 강력한 반대를 일축하고 쿠릴열도를 방문한 데 이어 7월 초에도 방문해 개발을 독려함.
- 일본은 러시아가 쿠릴열도 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이 700억엔(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러시아가 쿠릴열도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임. 이에 대해 일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를 반복하면서 발만 동동 구를 뿐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음. 일본은 지일파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영토 협상 진전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함.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지난 28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지만, 영토 문제에 별 소득이 없었음. 일본은 러시아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쿠릴 남부 2개 섬의 일본 인도를 언급했던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을 디딤돌로 쿠릴열도 반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음.



자. 기. 타

● 대만, '남중국해 분쟁' 다자교섭 지지(8/1)

- 대만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교섭 논의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대만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남중국해 문제는 다자협상 틀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 제정 논의에 대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사(CNA)가 1일 전함. 이 관계자는 "대만이 이 논의에서 배제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대만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논의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아세안은 지난달 연례 회의를 열고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음. 중국은 그동안 미국 등 제3국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자간 교섭이 아닌 분쟁국 간의 양자교섭을 통해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을 반복해 왔음.
- 대만은 이에 앞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토 분쟁에 공동 대응하지는 중국 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음. 남중국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요지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중·일 FTA 실무협의회 8월 중국서 개최(8/2)

- 정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협상개시 선언을 위해 다음 달 중 중국에서 제2차 사전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함. 통상교섭본부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협약이 진행 중인 FTA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힘.
- 앞서 6월20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일 FTA 1차 사전실무협약에서 세 나라는 협상운용방식과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함. 최 대표는 아세안(ASEAN)과 아시아 6개국 간의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CEP) 협정에 대해선 "아세안측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함.
- 분야별 협상지침 협상을 진행 중인 한·중 FTA와 관련 "양국 간 무역구조나 경제구조의 특징을 감안해 가급적 양국의 무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민감한 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최 대표는 한·일 FTA에 대해선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연내 협상재개설을 부인함. 그는 한·일 FTA가 재개되려면 "양국의 이익이 균형 잡히게 반영될 수 있는 협상방식에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